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5~6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 개최 -
- 사회적 고립 예방법, 전국 실태조사 등 본격적 정책 이행 위한 준비 착수 -
- 복지부 제1차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 지정하여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부처 차관 차장 7명(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소방청) ▲ 지방자치단체 2명(서울, 부산) ▲ 위촉직 민간 위원 10명

■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된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❶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과 ❷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안) 】

- 정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 정책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여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 전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 】

-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23-'27)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8개의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보고되었다.

*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②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③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④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하여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가칭) '마음점빵'*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마음'과 '점빵'(작은 가게의 옛말,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점빵'으로 표현)을 합친 말로,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 돌봄 프로그램 지원할 예정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향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153. 지역복지과. 2026. 5. 13.

II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 ‘크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국민 편의 증진 5개 과제 개선 예정 -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등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로 총 5건이다.

-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0,160원) 초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음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지)소(1,482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7개 시·도)

** 지역보건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진료·의뢰·회송 업무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한다.

* 신규면허 취득자,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및 대학원 재학생 등

- 또한,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189. 보건의료정책과. 2026. 5. 25.

III

국민 체감 AI 복지서비스 만든다, 수행기관 7곳 선정

-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 고독사·고립 예방 등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 총 118.75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5월 28일(목) 복지현장의 신속한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복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증과 현장 적용까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현장의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18.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총 7개 기업(컨소시엄)으로 ▲고독사·고립 예방 등 심리케어 AI 분야 5개 기업,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분야 2개 기업이다.

■ 고독사·고립 예방 등 심리케어 AI 분야에서는 ▲르몽 주식회사, ▲(주)정선메드, ▲(주)풍, ▲(주)브이터치, ▲(주)온앤온정보시스템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 내용, 생활습관 등을 분석하여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고 공감형 대화를 통해 정서 지원이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등이 실증에 참여하여 개발된 AI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검증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분야에서는 ▲(주)메타빌드, ▲(주)세종디엑스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는 AI를 개발한다. 개발된 제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노원구청, 경기도청 등 지자체에 적용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서비스로 검증 및 최적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를 구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AI 복지서비스가 개발·확산되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복지서비스가 현장에 조속히 적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분야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208. 복지정보기획과. 2026. 5. 28.

IV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막아 국민 보험료 지킨다

-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 하반기부터 본격 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거짓청구 :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청구하는 행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하였으나,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 원으로 전체 부담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 거짓청구 주요 적발사례 】

-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 ②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 ③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로,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 ④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 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청구
- ⑥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 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된 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 (목적)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및 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 등 심의
(구성) 총 11명 : 공공위원(3명), 의약단체(5명), 시민단체(1명), 전문가(2명)

- 거짓청구에 대한 조사항목은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부당청구 사례별로 판단 기준(시나리오 룰)(198개 항목)을 개발, 요양기관별로 위험점수를 산정하여 부당청구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현지조사 업무 등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 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징벌을 부과한다.

-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하여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 (예시) 부당금액이 20억 원일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최대 100억 원으로 부당이득 환수액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 원을 징수

- 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반사실을 공개한다.

- 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235. 보험평가과. 2026. 6. 4.